환경사업의 질적 변화가 시급하다!

LG연구원, 저탄소 경제 전환 대비해야 ... 온실가스규제 환경사업 촉진

국가 전체가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 바뀌는 만큼 경제 주체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정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8월28일 <온실가스 규제, 환경산업 지형 바꾼다>라는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규제와 가스 배출권의 거래시장 확대는 그동안 정체돼 왔던 환경사업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사업의 양적인 변화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사업의 질적인 변화로 온실가스 규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사업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온실가스 규제 강화는 환경과 에너지의 통합을 넘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초래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산업의 환경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대한 연비규제가 강화되면서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바이오연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들이 자원 절약형,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정기 연구위원은 “일정한 분야에서 탄소를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전체 경제 주체들이 저탄소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의 억제가 불가피해 에너지관련 환경사업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규제는 다양한 신규사업 기회를 창출하는데,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사업들이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창업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기 연구위원은 “정부와 기업의 대응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사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출하는 것은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로의 체계적인 이행을 준비해야 하며 기업들은 저탄소 경제시대에 맞는 제품과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8>